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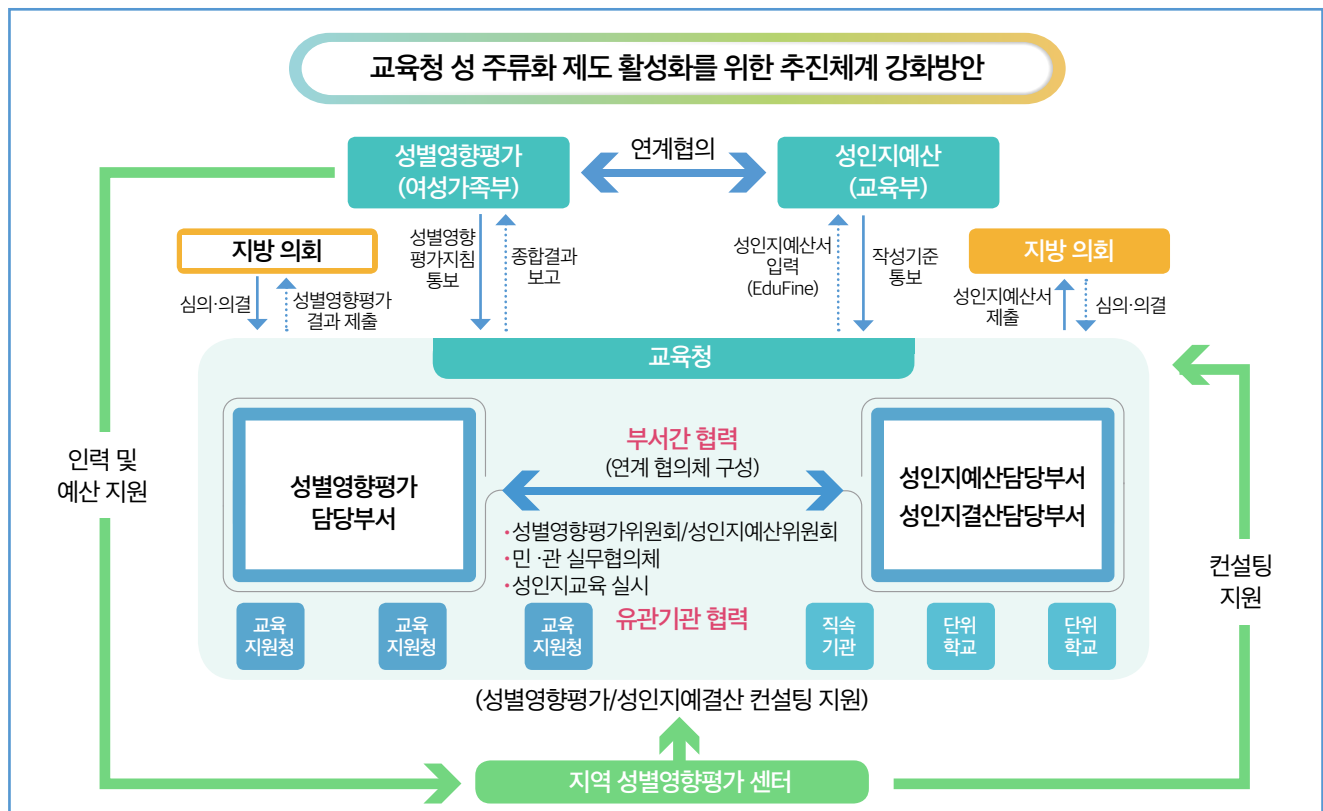
KWDI 이슈페이퍼

수행과제명 교육청 성 주류화 제도 활성화 방안
과제책임자 김동순 연구위원

교육청의 성 주류화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초록

- 2010년 지방교육자치 실시 이후 교육청의 교육행정 및 정책과정에서의 성평등 제고를 위해 교육청의 기관특성에 맞는 성 주류화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과제가 무엇인지 제안함.
- 교육청의 특성과 성 주류화 제도 추진체계 강화 :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협력 강화, 교육청 내에서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결산 담당부서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교육청 본청뿐 아니라 지원청, 직속기관, 단위학교 현장을 포괄할 수 있는 내부 제도 추진체계를 강화해야 함.
- 제도 운영 주체별 성 주류화 활성화 : 성별영향평가 제도와 성인지예산 제도, 성인지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여성가족부, 교육부, 교육청, 지역성별영향평가센터의 역할을 제안함.



1. 배경 및 문제점

- 2010년 교육감에 대한 주민직선제가 실시되면서 지방교육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음. 이후 교육청은 교육부의 기관위임사무에서 자치사무의 확대로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교육정책을 기획하는 기회가 확대되었음.

▶ 또한 2018년부터 공론화된 스쿨미투를 계기로 교육현장의 성평등 요구가 배가되고 있음. 이를 위해 교육행정 전반의 성평등 제고를 위한 성 주류화 제도 활성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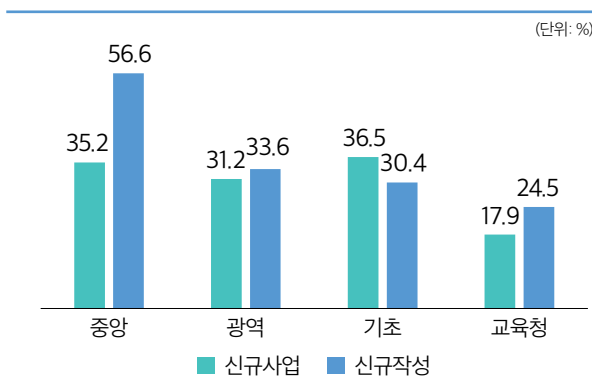
- 교육청의 성 주류화 제도 운영 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성 주류화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 전체적인 종합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특히 최근에 올수록 교육청은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기초자치단체에 비해서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소극적이거나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음(여성가족부, 2020;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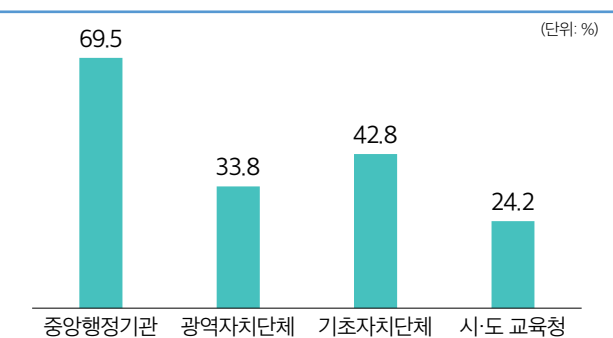
▶ 예를 들면, 2019년 교육청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를 보면, 3년 이상 주기로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전혀 실시하지 않았으며,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사업 성별영향평가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교육청이 5개나 되었음.

▶ 또한 법령·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에 따른 정책개선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개선이행률도 타 기관유형에 비해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교육참여도 가장 낮았음(여성가족부, 2020: 248-250).

<그림 1> 기관유형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특성(2019년)



<그림 2> 기관유형별 성별영향평가 전체 개선이행률(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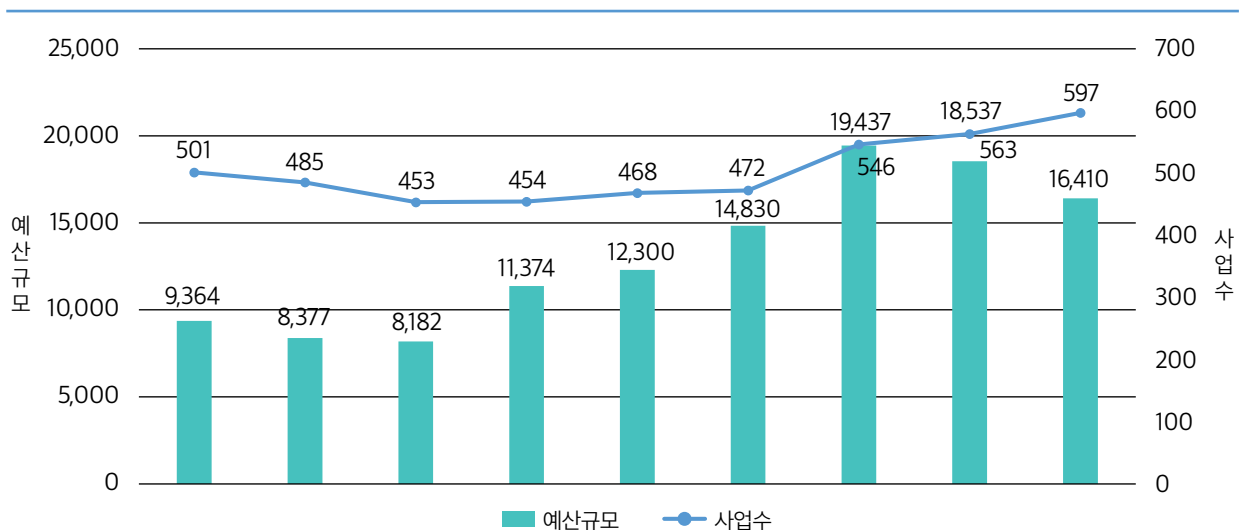
자료: 여성가족부(2020). 『2019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p. 249.

● 한편, 2013 회계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도 교육청의 성인지예산 제도로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 ▶ 2016년부터 대상사업수는 완만하게 증가 추세이나 예산규모는 증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것은 예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을 대상으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김수진 외, 2019: 14;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검색일: 2021.11.2).
- ▶ 이러한 추세 속에서 교육청의 성인지예산 규모가 각 교육청의 전체 예산에 비해서 여전히 너무 적다는 문제 지적도 있음(김수진 외, 2019: 15; 김희경, 2021).
- ▶ 뿐만 아니라 교육청이 추진한 성인지예·결산서가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구분이 모호하거나, 또는 사업목표와 성과목표가 부합하지 않거나, 성과목표 설정 및 목표치 설정이 적절하지 않은 사례가 상당수 발견된다고 지적하였음(김병곤, 2019; 김희경 외, 2020; 김희경, 2021).

<그림 3> 시·도 교육청 성인지예산 추진 현황(2013~2021 회계연도)

(단위: 백만원, 건)



자료 1. 2013~2016년은 김수진 외(2019). “시·도 교육청의 성인지예산 변화 추이 및 결정요인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p.15에서 참고함.

2. 2017~2021년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 예산공시 > 재정계획 > “성인지 예산” 자료를 참고함. (<https://www.eduinfo.go.kr/portal/intg/intgInfTColBudgPage.do?mainM=1&subM=1&myInfId=QZL1VV12065P306N4G3S1924154&myLinkFlag=Y&myInfNm>, 검색일: 2021.11.2.)

- 뿐만 아니라 성 주류화 제도 추진에 있어서 교육청은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기초자치단체와는 행정조직 및 주요정책 측면에서 다른 특성이 있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광역/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성인지예산서 작성 지침을 마련·통보하는데 비해서, 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작성 지침을 통보받고 있음. 하지만 교육청의 특성을 고려한 성 주류화 제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에 지방교육자치 실시 이후 교육청의 교육 행정 및 정책과정에서의 성평등 제고를 위해 교육청의 기관 특성에 맞는 성 주류화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조사 및 분석결과

① 면접조사에서 나타난 교육청 성 주류화 제도 활성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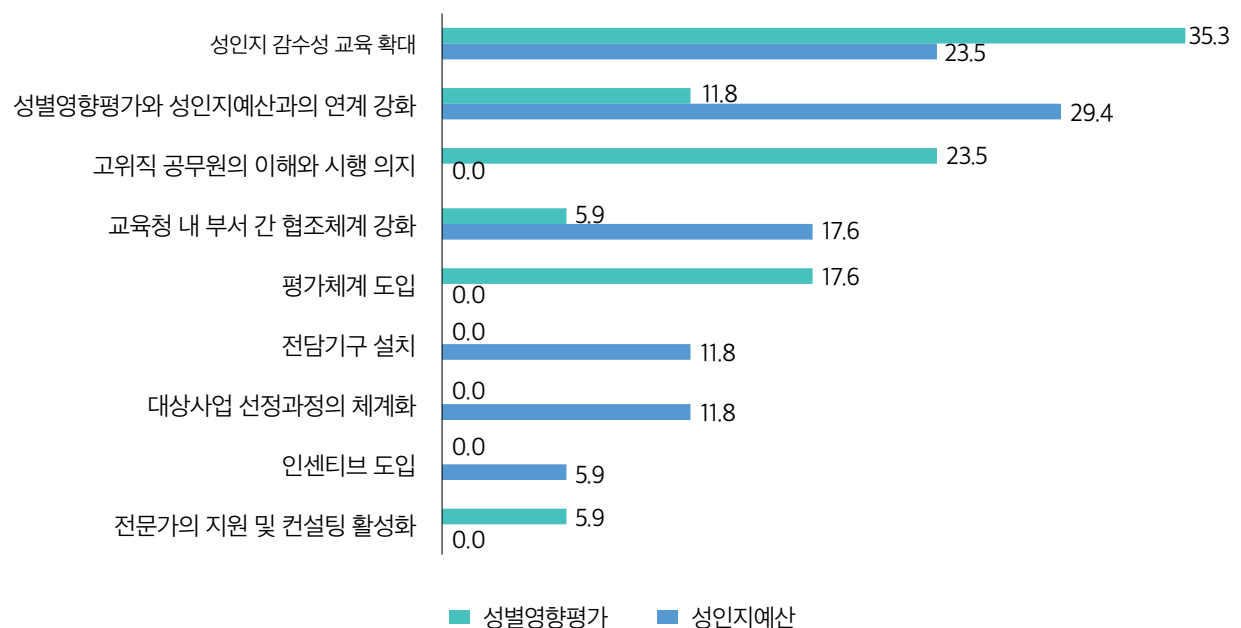
- ▶ 조사대상 : 교육청 성 주류화 관련 제도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42명
- ▶ 교육청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정책분야는 주로 교육정책이며 사업 대상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으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비해서 제한적임.
 -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는 시스템(GIA시스템)과 교육청의 행정업무시스템인 에듀파인(EduFine)이 연계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움. 두 시스템의 연계가 필요함.
- ▶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 경험과 활성화 방안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지침의 사업 대상과제 선정기준이나 평가서 작성 사례에 교육청의 특성 반영 미흡, 대상과제 선정 기준 및 작성사례 개선 필요
 -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성과평가 시스템 부재하며 대안 마련 필요
- ▶ 성인지에·결산 제도 운영 경험과 활성화 방안
 - 성인지예산서 작성 담당부서와 결산서 작성 담당부서의 협력체계 구축 또는 담당부서 일원화 검토 필요
 - 성인지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성인지교육 운영 경험과 활성화 방안
 - 교육청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콘텐츠 개발과 보급이 필요함.
 - 교육청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 인지교육을 의무적인 연수프로그램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②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교육청 성 주류화 제도 활성화 방안

- ▶ 조사대상 : 17개 시·도 교육청의 성 주류화 제도 담당공무원 250여명
- ▶ 성별영향평가 기관담당자의 경우, 교육청 전체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확대(35.3%), 고위직 공무원의 이해와 시행 의지(23.5%),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교육청의 성별영향평가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평가체계 도입(17.6%) 순으로 제도 활성화 우선 실시요소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남.
- ▶ 성인지예산 기관 담당자의 경우, 성인지예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 확대(29.4%), 교육청 전체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확대(23.5%), 교육청 내 부서 간 협조체계 강화(17.6%) 순으로 우선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 기관담당자의 성별영향평가 제도 및 성인지예산제도 활성화 우선적 실시 요소(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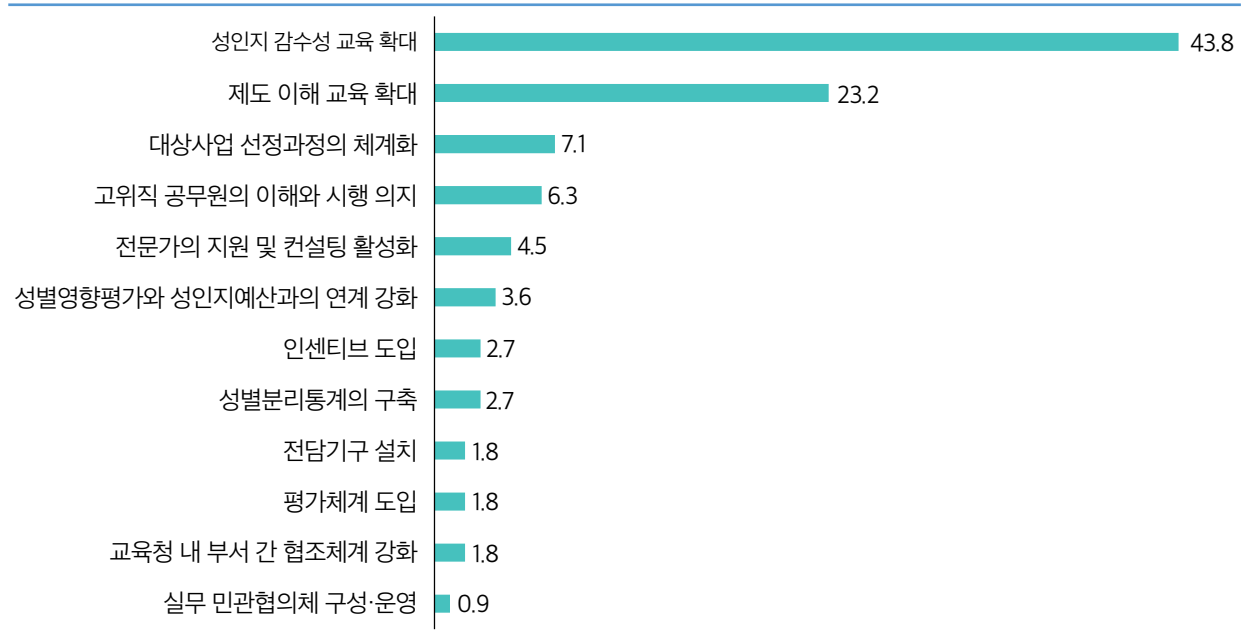
(단위: %)



- ▶ 성별영향평가 사업담당자의 경우 교육청 전체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확대(43.8%), 성별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 확대(23.2%), 대상사업 선정과정의 체계적 운영(7.1%) 순으로 우선 실시할 요소로 나타남.

<그림 5> 사업담당자의 성별영향평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우선적 요구사항(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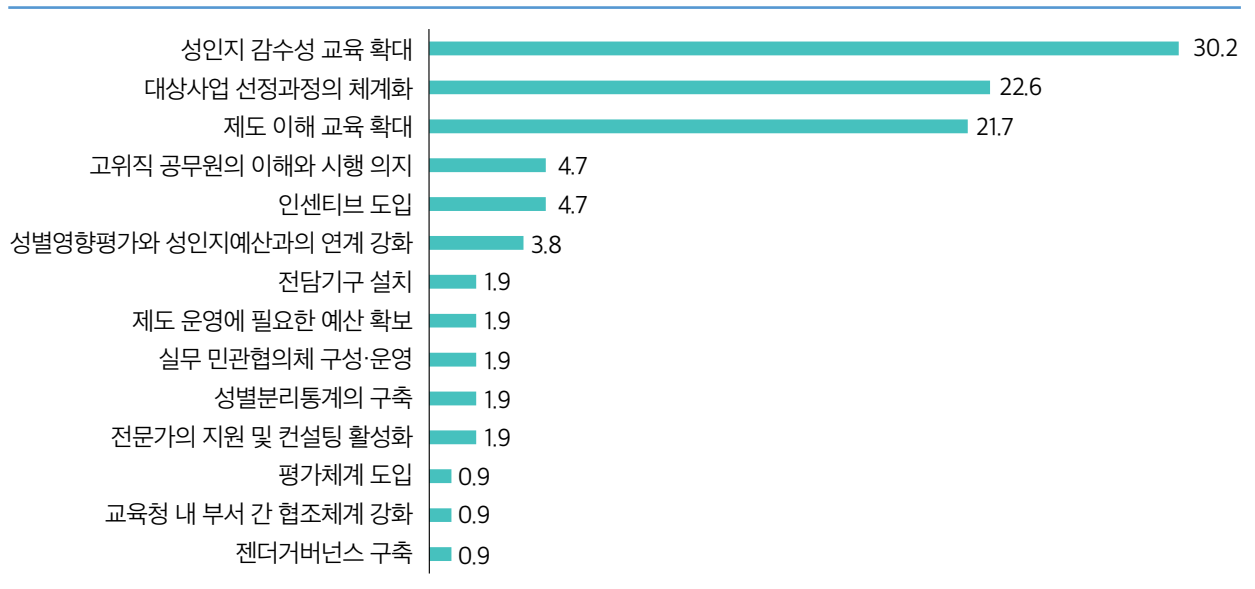
(단위: %)



- ▶ 성인지예산 사업담당자는 교육청 전체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확대(30.2%), 대상사업 선정과정의 체계적 운영(22.6%), 성인지예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 확대(21.7%) 순으로 우선 실시할 요소를 선정함.

<그림 6> 사업담당자의 성인지예산 제도 활성화를 위한 우선적 요구사항(1순위)

(단위: %)



③

사례조사에서 나타난 교육청 성 주류화 관련 제도 운영 모범사례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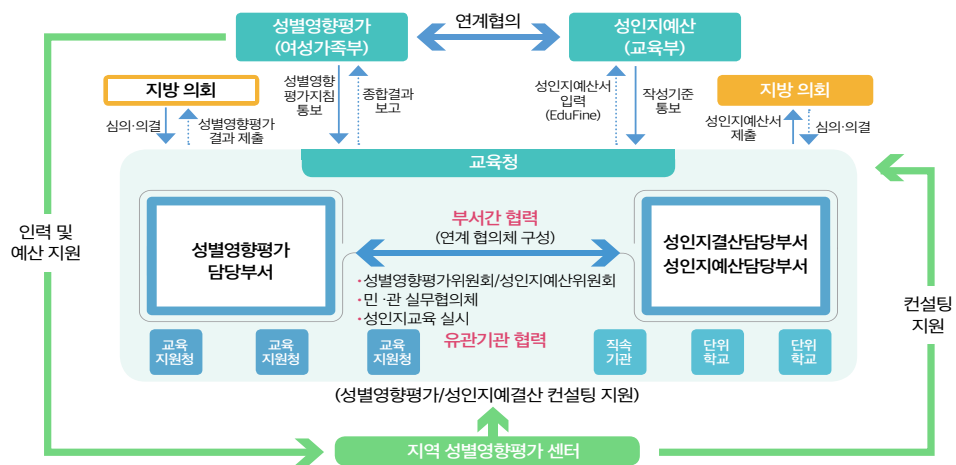
- ▶ (성평등팀 설치) ‘가’ 교육청은 2018년 스쿨미투 이후 관내 학교 및 본청 내에 성평등 문화 확산 또는 성폭력 근절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 3월에는 ‘성평등팀’을 구성하여 인력을 배치하였음. 6명의 팀원 중 성별영향평가를 담당하는 담당자는 2인임. 또한 팀 내에 별도로 인권분야 활동 경력을 가진 전문가를 성인권정책전문관으로 채용하여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음.
- ▶ (성인지 전문가 채용) ‘나’ 교육청은 여성정책 관련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이를 채용하여 팀업무를 이끌도록 한 결과, 성 주류화 추진 중요성에 대한 팀원 및 청 내 구성원들의 인식이 확장되었던 것으로 파악됨. 또한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총괄 담당할 기관담당자를 지정하여 전반적인 제도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등, 제도 추진 활성화 흐름이 만들어졌음.
- ▶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과제발굴 체계화) 전남교육청은 교육청 내부의 성 주류화 정책 담당자(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결산, 성평등 교육)와 외부의 젠더 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긴밀한 소통의 기회를 갖고 사업 대상과제를 선정하였음.
- ▶ (지역 여성정책연구기관과의 MOU를 통한 제도 운영 내실화) ‘라’ 교육청은 ‘라’ 지역의 여성정책연구기관과 2016년부터 MOU를 체결하였으며, 성 주류화 정책 추진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음. 컨설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도 참여 인력 역량강화와 정책개선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음.
- ▶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조례 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1년에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최초로「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22년 1월부터 시행예정임. 교육청의 성인지예산제도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갖췄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3. 정책제언

● 교육청의 특성과 성 주류화 제도 추진체계 강화 필요

- ▶ 교육청 성 주류화 제도 추진에 관해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협력체계 강화 필요
- ▶ 교육청 내에서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결산 담당부서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본청뿐 아니라 지원청, 직속기관, 단위학교 현장을 포괄할수 있는 내부 제도 추진체계 강화 필요

<그림 7> 교육청 성 주류화 제도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강화방안





제도 운영 주체별 성 주류화 활성화 방안

▶ 교육청의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제도의 운영 주체별로 해야 할 역할은 다음과 같음.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결산			성인지교육	
여성가족부	교육청	교육부	여성가족부	교육청	여성가족부	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지침 개선: 교육청용 사업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기준과 작성 사례 제시	사업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의 체계화	연간 시·도 교육청의 성인지예·결산 추진결과 종합분석 필요: 우수 운영기관 발굴 및 홍보	성인지예·결산 협의회에 교육부 참여 필요	성인지예·결산서 담당부서의 협력 체계 강화 및 일원화 검토	교육청 특성을 반영한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강사풀 구축	전체 공무원 대상 성인지교육 강화: 의무교육 대상으로 지정필요
교육청의 에듀파인 (EduFine) 시스템과 성별영향평가 시스템 연계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 강화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기준 개선	성인지예·결산제도 교육의 시의적절 제공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조례 마련		
교육청의 성별영향평가 추진을 독려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마련	공무원 성별영향평가 및 전문가 특 정성별영향평가 적극 추진 필요			민관협력 강화: 성인지예산 제도 운영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지역성별영향평가 센터와의 협력 강화		
교육청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 하고 홍보·공유						
지역 성별영향평가 센터의 교육청 지원 강화						

- ▶ 위 사항 중 좀 더 자세한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의 교육청 특성을 반영하는 성별영향평가 지침 개선을 들 수 있음. 사업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기준 및 작성 사례 개선이 필요함.

<표 4>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지침 개선안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선정기준(지방자치단체)		
현행		개선안
적용 기관	I. 성별영향평가 제도 1. 성별영향평가 제도 개요 □ 적용 기관 ○ 중앙행정기관 : 부·처·청, 위원회 등 ○ 지방자치단체 : 시·도, 시·군·구, 시·도 교육청	(좌동) ○ 지방자치단체 : 시·도, 시·군·구,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포함)
공통 주제	○ 4개 사업분야 (생략)	(4개 사업분야: 좌동) (신설) ⑤ 유·초·중·고교 교육 관련 사업 : 교육교재, 영재교육, 교원연수, 진로교육, 도서관 운영, 학교시설·공간 지원 사업 등

참고자료

김병곤(2019). “성인지 예산의 집행과정 평가: 전라남도교육청 성인지 예·결산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김수진 외(2019). “시·도 교육청의 성인지예산 변화 추이 및 결정요인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8(1). pp.1-28.

김희경(2021). ‘충청북도교육청 2020 성인지 결산검사’. 내부자료.

김희경 외(2020).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교육청 2019 성인지예·결산서 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여성가족부(2020). 『2019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2021). 『2020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홈페이지. 예산공시 > 재정계획 > “성인지 예산”자료를 참고함.

(<https://www.eduinfo.go.kr/portal/intg/intgInfTColBudgPage.do?mainM=1&subM=1&myInfId=QZL1VVI2065P3O6N4G3S1924154&myLinkFlag=Y&myInfNm>, 검색일: 2021.11.2.).

주관부처 : 시·도 교육청 : 성별영향평가 제도운영 담당부서, 성인지예산 제도 담당부서, 성인지교육 담당부서
 (※ 교육청별 담당부서가 약간씩 다름. 자세한 담당부서는 본 보고서 참고)

관계부처: 여성가족부 : 성별영향평가과

교육부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지방재정교육과